

호국 영웅의 희생과 불평등한 현실을 돌아보며

의정단상

박원중
전남도의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과거 조국의 위기 속에서 젊음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은 과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던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에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들의 헌신에 대해 국가에서 보답하는 차원으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 급여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 명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42만원을 지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수당을 달리 책정하여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들여다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만원부터 2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까지 깊게 보자면 2만원부터 40만원까지 비교하기도 어려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를 합한 금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최저지급액을 기준으로 5배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일념으

로 모든 것을 헌신했던 대한의 아들들은 이제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보상에도 큰 차이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액수의 적음을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각기의 재정 여력, 참전 유공자의 비율, 역사적 사건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당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경우 당시 주요 전투가 이루어진 지역은 그것을 명분으로 보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당 지급액이 높은 곳도 있다.

대부분은 재정 자립도 등을 바탕으로 여건이 나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돈을 쪼개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액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데다 유공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적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렇듯도 불구하고 지역별 참전 명예 수당의 차이는 단순한 지급액의 차이를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공헌의 정도를 지역별로 차별받는 것과 같은 정신적, 물질적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한다.

더불어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과 고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힘들어 참전 수당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수당의 지속적인 형평성 문제는 유공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차이와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 심지어는 참전유공자들의 지역 이주까지 유발하며 수많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크게는 지역 간의 갈등까지도 발생

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모르고 있지 않지만, 42만원 지급이라는 참전 명예 수당 뒤에 숨어 철저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른 산발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통일된 국가 주도형의 보훈 재정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후유증, 건강 상태, 거주 지역, 경제적 수준과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수당을 책정하되, 지급액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조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참전 명예 수당은 단순한 급여가 아닌 조국을 위해 몸 바쳐 나라를 지켜오신 분들에게 대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지급처럼 지역별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한민국의 영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나라를 위했던 국민의 헌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이 있기까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성장해 온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 안 되며 그에 합당하게 그리고 모든 유공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바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자유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감사 표현이자 의무다.

社說

첫 발 내디딘 '호남권 메가시티' 응원한다

광주·전남·북 상호협력 등 다짐

광주와 전남·북 등 3개 자치단체가 4일 호남권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017년 이후 7년만이라고 한다. 조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호남권은 농업과 식품 산업의 중심지이면서 전통 문화와 관광자원 등이 풍부해 어느 지역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새롭게 써 가겠다는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응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한 이날 호남권 협의회의 핵심은 전국적인 초광역 메가시티 공론화 흐름 속에서 지역소멸의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날 선언문에도 3개 시·도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경제동맹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등 신규사업 발굴 등이 담겼다.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위기극복, 동학농민혁명 선양,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에 상호협력할 것도 다

잡했다. 광역단체를 넘어 초광역단체간 협력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 특히 도로나 광역 철도 건설은 3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추진할 때 중복을 막을 수 있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꼭 필요하다. 해상과 육상 교통의 연결점으로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산실인 호남권이 연합할 경우 물류부터 에너지 독립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도 도모해 갈 수 있다.

호남권 메가시티의 첫 발을 내디딘 광주와 전남·북은 이번 경제동맹이 광역 SOC부터 산업분야 협력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상생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라는 강기정 시장과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3개 시도가 힘을 합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록 지사의 언급에 호남권 협의회가 가야 할 방향이 담겨있다.

광주 AI 조성사업 2단계 더이상 지연 안돼

광주시 기재부에 '예타 신청'

순항하던 광주 인공지능(AI) 중심 도시 조성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AI 조성사업은 1단계 5개년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2단계로 진입하려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 지연 등으로 불투명해지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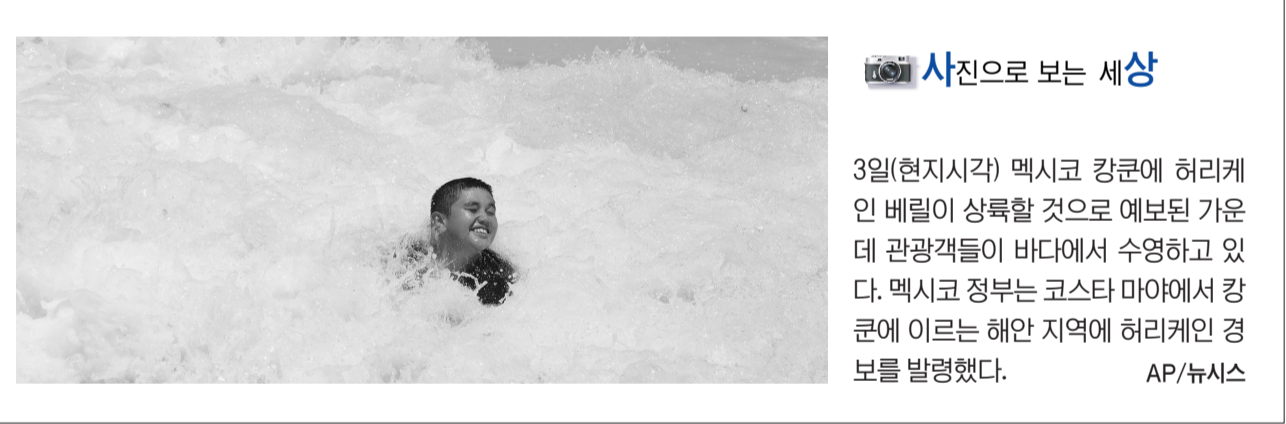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와 과기부는 총사업비 6000억 원 규모(국비 3965억 원·지방비 1385억 원·민자 650억 원)의 AI 2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 신청을 기재부에 완료했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22대 국회에 입성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에게 AI 2단계 예타 면제를 요청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시는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예타 면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예타 신청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8월 중 AI 2단계 사업이 예타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8개월 후인 내년 4월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될 것

으로 봤다. 하지만 8월에 예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간은 더욱 지체될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가 당초 지난 3월 예타 신청을 미뤘으나 '사업 지연'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과기부가 예타 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예타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가 6월 재신청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AI 산업은 광주의 새로운 먹거리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조 원대의 SOC 사업 대신 AI 산업 육성을 택했다. 무모해 보였던 AI 산업은 지난 2019년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미 1단계 조성(2020~2024년)이 올해 마무리된다.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AI 산업을 광주시가 선점한 것이다. 하지만 2단계 사업 지연 소식은 뼈아파 보인다. 세계적으로 AI 산업은 급변하고 있다. 정책적 판단이 늦어지거나 오판은 용납될 수 없는 곳이 AI 생태계다. 그래서 정부와 광주시의 치밀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이 아쉽다. AI의 성공여부는 '시간 싸움'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3일(현지시각) 멕시코 칸쿤에 허리케인 베릴이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관광객들이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코스타 마야에서 칸쿤에 이르는 해안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다. AP/뉴시스

서석대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영원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2019년 3월 6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 부가티가 제네바 모터쇼에 '라 브와튀르 노와르'라는 이름의 승용차를 공개했다. 부가티 창립 110주년을 기념해 1대, 한정판으로 출시했던 이 모델의 최고출력은 1500 마력. 현대자동차의 최상위 모델인 'G90 블랙'이 450 마력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힘이다. 가격도 공개 당시 1670만 유로, 한화로는 253억 6100만 원을 호가했다. '극한의 독점성과 럭셔리함의 상징'이라는 게 부가티의 자랑이었다.

부가티는 강렬함과 호화로움, 우아함을 겸비한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엔지니어이면서 예술가로 활동했던 장립사 에토레 부가티의 영향을 받아 기술과 디자인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금도 부가티는 자동차 업계에서 럭셔리한 고성능 차량의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5년 최고 시속 400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 차량으로 기록된 베이롱부터, 2016년 출시된 장인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샤롱까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다.

지난 6월 공개된 트루비용도 한 세기가 넘는 부가티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역작이다. 스페셜 에디션은 제외하고 무려 20여 년만에 부가티의 3번째 하이퍼라인으로 제작된 트루비용은 내연기관 시대를 넘어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한 부가티의 첫 번째 도전이다. 최신 탄소섬유 소재로 만든 차체와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서스펜션, 기능과 미학을 조화시킨 디자인도 115년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다. 오는 2026년 양산을 시작해 250대만 한정 판매하겠다는 트루비용의 가격도 380만 유로, 한화로는 57억 원에 이른다.

최근 일부 친(親) 러시아 네티즌들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각종 옵션 등을 포함한 67억 원짜리 슈퍼카 부가티 트루비용을 구입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러시아를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아무리 전쟁중이지만 전쟁과 무관한 적장의 부인을 '명품 자동차'로 폄하한 것도 치졸한 꼼수다. 친 러시아 측 매체들은 전에도 수차례 '젤렌스키가 행복했다'거나 '이스라엘로 도주했다'는 등의 뉘앙스 이크로 비웃음을 자초해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두려움이 과잉 대응을 불러온 것일까. 금방 들뜬날 거짓을 진짜처럼 퍼뜨리는 러시아의 잔꾀가 어디선가 본 듯 한 데자뷰처럼 가소롭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